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진

조기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성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포용적 국가균형발전 가치실현의 생활SOC정책	04
II	생활SOC의 추진배경	06
III	생활SOC 3개년 계획과 현황	09
IV	충청북도 생활SOC복합화사업 현황	20
V	공공시설 및 생활SOC 이용현황	23
VI	생활SOC운영방안 해외사례	30
VII	지속가능한 생활SOC의 운영방안	
	1.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방향성	38
	2. 생활 SOC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40



포용적 국가균형발전 가치실현의 생활SOC정책

- 생활SOC정책은 포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소명을 담고 있음
 - 양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제된 사회계층의 배려 및 지역의 불균형의 완화를 수단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온 국가역할에 대한 대안적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음
 - ‘포용적 성장(혹은 포용적 경제)’의 개념은 World Bank, OECD, WEF, UN-HABITAT 등의 국제기구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내용으로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 더해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과 그 시행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사회 약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들의 연대를 통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회복을 강조
 - 생활SOC는 보육·복지·문화·체육·안전 등의 국민 일상생활의 공공서비스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지역 사회적 공간을 연결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 인프라
- 생활SOC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원을 확충하는 매개체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공의 장(public arena)의 의미
 - 생활SOC는 지역의 공유자산(common resource)이자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과거의 공공서비스시설과 차별화됨
 - 현재 지자체는 문화·교육·건강·복지·체육 분야에 1관(館) 공공시설을 보유·운영하고 있지만, 현행 공공시설은 지자체의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체제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시설은 주인없는 공유지(公有地)와 같아,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한계
 - 생활SOC사업은 정부-주민 간 협력에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개인 간 연계, 사회적 네트워크 및 상호호혜성(mutual reciprocity)을 높여주는 신뢰와 규범의 공공의 장(public arena)을 위한 지역주민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



- 생활SOC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최소수준 생활을 누리는 포용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 생활혁신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생활SOC시설 건립 정책수단 및 운영체제 방안 역시, 기존 방식과 달리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생활SOC의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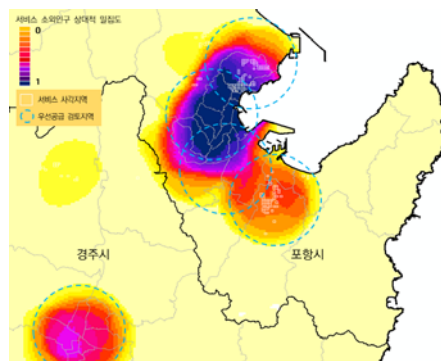
- 생활SOC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전국적 국가최소 수준의 생활인프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제고를 목표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 서비스는 문화·교육·건강·복지·체육 분야에 1관(館) 공공시설을 보유·운영에 따라 행정구역 내에서 서비스 부족과 서비스 사각지역이 존재함으로써 지역 간·지역 내 서비스의 격차가 존재

[생활SOC 서비스 소외지역의 기준]

- 국토부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차량 15분)과 문체부의 국민체육센터 공급기준(차량 10분, 배후인구 4만 명당 1개소)을 **동시 고려**
- 소외지역(사각, 부족) 중 서비스 소외인구 밀집지역을 선정
 ⇒ (서비스 사각지역) 국가최소기준 미달, 접근성이 하위 20% 이하
 (서비스 부족지역) 거주 인구 수 대비 시설 용량이 부족한 지역
- ※ 서비스 소외지수 : 서비스 소외(접근, 용량)인구의 상대적 밀집도(도시, 비도시 구분)
 체육관, 수영장 소외인구를 각각 도출 후 **중첩지에 국민체육센터(체육관+수영장) 공급**



서비스 사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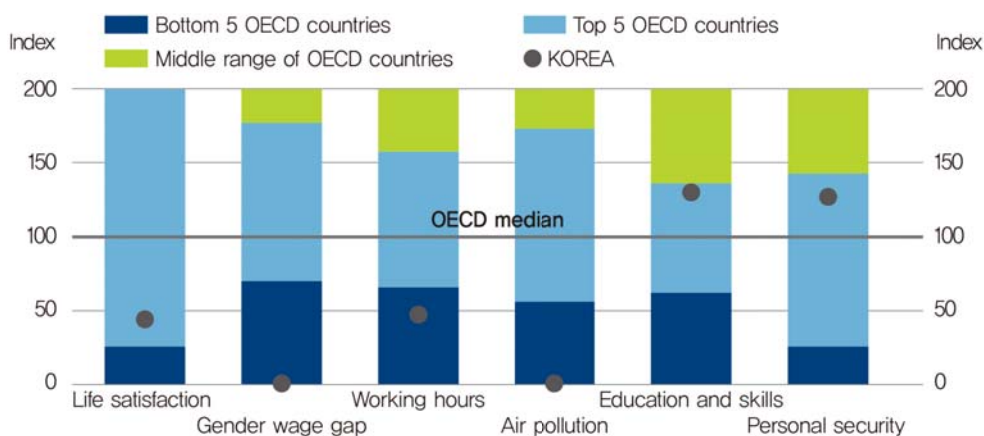


우선공급 검토지역

(포항시 4개소, 경주시 1개소 검토필요)

- G20 국가들 중 도로부분의 SOC 구축부분에 상위(예,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연장 3위, 철도연장 6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OECD국가의 더 나은 삶의 지수 기준 29위, UN행복지수 기준 57위에 머물고 있음(국무조정실, 2019)

|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비교 |



주 : OECD 중위 수준에 대한 한국의 상재거 수준을 나타냄
 지수 중위값 = 100
 출처 : OECD 경제보고서 한국(2018)

- 국제비교를 보면, 생활인프라의 격차는 5배에서 12배 이상의 접근성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음 '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의 64.7%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실내체육시설 1개소 당 인구를 보면 지역의 신도시·중심지는 1.3~2.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구도심은 4.5~10만 명으로 지역 내 격차가 약 5배에 이르고 있음

| 주요 생활인프라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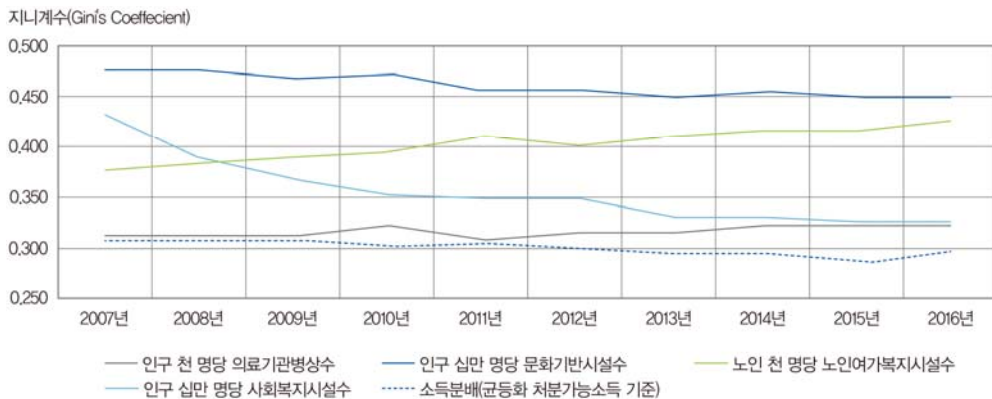
■ 주요 생활 인프라



출처 : 국무조정실(20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 생활SOC의 서비스공급의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불평등수준이 가장 심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 간 격차는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국토연구원, 2018)

| 생활SOC 공급의 공간적 불평등 수준 변화(2007~2016) |



주 : 생활SOC의 지니계수는 행정구역 경계가 변하지 않은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임
출처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2018.12.31)



III

생활SOC 3개년 계획과 현황

생활SOC개념



-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의미(생활SOC3개년 계획)
 - ‘국무총리 훈령*(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생활 SOC의 개념 |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 SOC(Social Overhead Capital)

중래의 SOC

-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  시설 효용 증진, 이용자 편의시설
지능형 교통체계, 복합터미널 등

생활 SOC

-  국민생활 편의 증진 시설
기초인프라(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  일상생활 기본전제인 안전시설
교통안전, 지하매설물안전, 화재 및 재난안전 등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생활SOC의 특성

- 기존의 사회기반시설과 비교할 때, 생활SOC는 보육·복지·문화·체육·안전 등의 국민 일상생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설’ 중심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
 - 과거 도로·항만 등의 건설 SOC사업은 경제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인 반면, 공공시설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생활 SOC와 유사하지만 중앙 및 지자체 정부 주도의 효율적 관리를 강조
 - 생활SOC는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한 생활혁신공간을 구축을 목표로 10개의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주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님

| 2020 생활SOC사업의 특징 |

분류	과거 SOC 사업	공공시설	생활 SOC 사업
분야	도로, 건설, 항만 등	문화, 복지, 체육 시설 제공	10개 생활 인프라 분야
이념적 가치	자본주의 생산성	자본주의 소비성	포용가치의 공간적 정의
정책방향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구축 (지역 외생적 발전전략)	공공서비스 제공	공동체형성을 통한 지역 생활혁신공간 기반구축 (지역 내생적 발전전략)
정책가치	효율성	효율성	형평가치에 기초한 포용성
정책목표	경제성장 기반 구축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생활혁신공간 구축
정책추진체계	국토계획 (정부주도)	중앙 및 지자체 (정부주도)	거버넌스 체제 (정부-주민 동반자 관계)
주요 정책수단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자체 재원	포괄보조금 (계약: 지역발전협약제도)
운영방식	직영/위탁	직영/위탁	직영//위탁/대안적 전달체계

출처 :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2019, 4월) 재구성

- 생활 SOC의 입지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공유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교감활동을 통해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는 장소기반의 시설로 볼 수 있음



- 지역생활공동체의 생활공간으로서 특정한 지역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유발하는 시설
- 공간단위로 볼 때,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권과 연계된 시설

| 지역공동체 단위 |

구분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도시생활권
	단지생활권	근린생활권	지구생활권		
인구	5천 명	1만 명	2~3만 명	5~10만 명	20~30만 명
행정 단위	-	초등학교 학군단위	「동」단위	「군」단위	「구」단위
공간적 범위	보행 5분 이내의 거리로 단지 내 시설 이용	보행 10분 이내의 거리로 초등학교의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	보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 생활권의 경계는 지역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구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0~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갖는 도시적 범역
특 징	최소 단위의 보행생활권	아동, 어린이의 활동권으로 가족단위의 생활권	2~3개의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	지방 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대중교통 이용권	대도시 규모의 생활권으로 자기 완결성 구조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6), p. 8

- 생활SOC시설은 기존의 도시공공시설 및 공공시설의 범주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물리적 시설
 - 행정구역 및 생활권별 인구 및 기능에 따른 분류로 볼 때, 지역주민의 기본단위의 기초생활권에 공공시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생활권별 공공시설 |

구분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도시생활권	
	단지생활권	근린생활권	지구생활권			
규모	인구	5천 명	1만 명	2~3만 명	5~10만 명	20~30만 명
	행정구역			읍, 면, 동	군	구
기능 분류	공공행정			주민센터,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6급우체국	군청, 출장소, 경찰지구대,	구청, 소방서, 경찰서, 4급우체국
	보건의료			도시보건지소, 보건지소 (읍, 면지역)		보건소
	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화		문고	도서관, 문화의집,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센터
	체육	단지 내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사회복지	노인정, 탁아소, 어린이놀이터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여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그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6), p. 9

생활SOC정책의 비전과 핵심과제

-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제시
 - ’18년 4월 15일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3년 간 국비 30조 원(지방비 포함 시 48조) 수준의 투자계획을 발표. 이를 통해서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걸 맞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중심의 생활패턴을 정착을 촉진, 지역공동체 형성, 20만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운영단계에서 2~3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

| 생활 SOC 3개년 계획 상 비전과 핵심과제 |



출처 : 국무조정실(20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 8대 핵심과제의 사업을 적용하여 여가활력분야, 생애돌봄분야, 안전안심분야에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접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활 SOC를 확충하여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격차를 완화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 여가활력의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에 총 14조 5,000억 원의 국비투자를 계획
 - 생애돌봄분야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초·중·고등학생 돌봄체계 강화, 공공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조 9,000억 원 규모의 국비투자할 계획
 - 안전안심분야는 총 12조 6,000억 원 규모의 국비투자를 계획하여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

| 향후 주요 사업별 추진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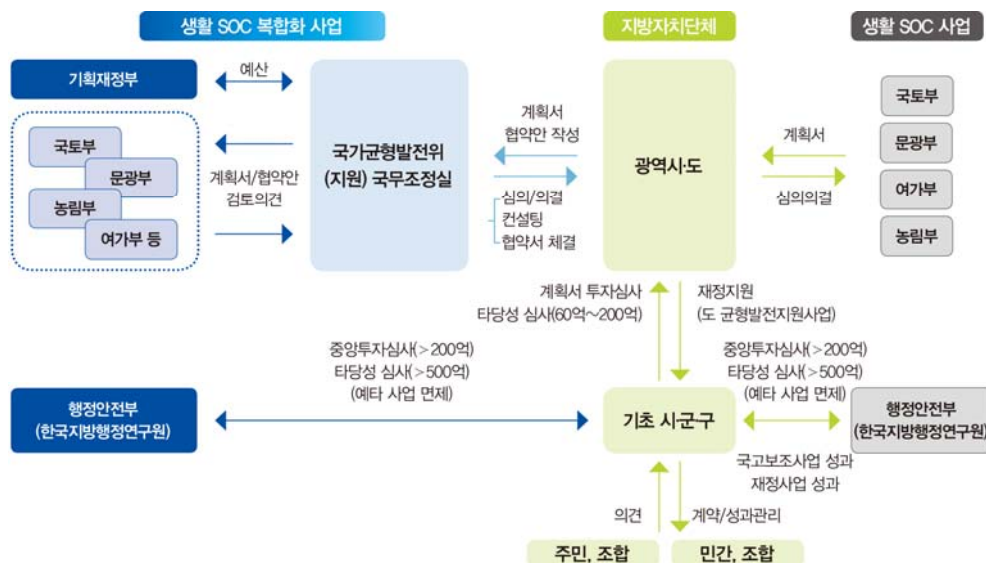
분야	핵심과제	'18년 ('17년도 말 기준)	'19~22년 목표 ('22년 착수기준)	목표치 ('18년→'22년)	국비 지원		
여가 활력	• 공공체육관	963개	1,400여개	• 접근성(13분→10분 내)	14.5 조 원		
	• 공공수영장	406개	600여개	• 접근성(22분→15분 내)			
	• 공공도서관	1,042개	1,200여개	• 접근성(12분→10분 내)			
	• 생활문화센터	141개	300여개	• 지역(시군구당 0.6개→1.3개)			
	• LPG 배관망	3개 군 136마을	13개 군 321마을	• 세대(12,824세대→55,000세대)			
	• 어울림센터	10개	100개	• 도시재생뉴딜사업연계 (98개→1,100여 개)			
	• 커뮤니티시설	488개	900여개	• 농산어촌개발 연계			
	• 여객복합시설		100여개	• 어촌뉴딜			
	• 주차장	(주거지) 1천 면 (전통시장) 74.4%	(주거지) 1,1만여 면 (전통시장) 100%	• (주거지) 1.1만여 면 추가확충 • (전통시장) 1,291곳 대상 확보			
	생애 돌봄	• 공공어린이집	6,096개 (35.4만 명)	8,600여 개 (50.2만 명)		• 공보육비율(25.2%→40%)	2.9 조 원
• 국공립유치원		10,896학급	12,900여 학급	• 취원율(25.4%→40%)			
• 온종일돌봄		(초등) 1.24만 개 (영유아) 17개 소	(초등) 1.5만 개 소 (영유아) 1,800개소	• 수해아동(36.2만 명 →53만 명)			
• 고령복지주택		2,426호	4,000여 호	• 지역(20개 시군구→40개 시군구)			
• 공공요양시설		110개	240여 개	• 지역 (78개 시군구→226개 시군구)			
• 책임의료기관		0개	40여 개	• 중진료권 지역의 종합병원 지정			
• 주민건강센터		66개	110여 개	• 지역(시군구당 0.3개→0.5개)			
•交通安全			안전시설/ 도로보수 위험도로/ 졸음쉼터	• 교통사고사망 (시3,781명→2,000명대)			
안전 안심		• 화재	다중시설보강 필요대상조사	720여 개동 보강	• 지역(시군구당 0.3개→0.5개)	12.6 조 원	
		• 재난	우수저류시설 91개소	우수저류시설 127개소	• 침수우려지역 (47.4%→66.1%)		
	• 지하매설물	66개	110여개	• 지역(시군구당 0.3개→0.5개)			
	• 생활SOC복합	시범사업	확대	• 균형위-부처-지자체 균형발전사업			

출처 : 국무조정실(20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재구성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기반으로 한 생활SOC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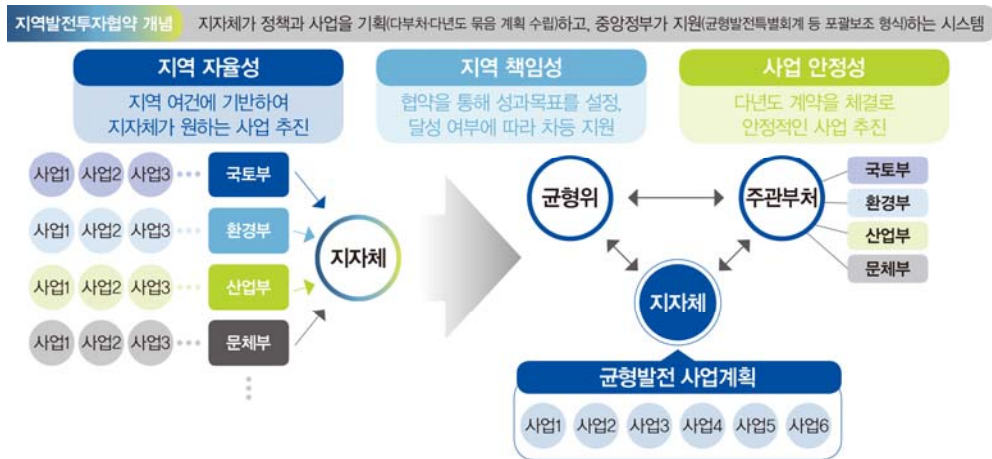
- 생활SOC사업은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기존의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균형발전정책사업으로 추진
 - 현행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제기되는 지역 간 시설 불균형, 중복 투자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설치하는 생활 SOC 시설복합화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복합화 추진단설립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주관부서와 협업하여 분기별 사업 추진현황 점검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의 역할, 투자협약 시 애로사항의 문제해결의 소통창구의 역할 및 상시 협약안 변경 수요 발생 시 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반면, 기존의 중앙부처가 직접수행해온 어촌뉴딜사업, 지역수요맞춤형지원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의 지역단위 재생사업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계 가능한 지역발전 지원사업으로 구성하되, 지자체가 직접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체계 |



-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기존의 개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공급하는 부처별 단일 사업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다부처 다듬음 계획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수단화하여 중앙-지방 간 실질적 협업 플랫폼을 조성
 - 생활SOC사업은 지역주도의 사업계획을 통한 상향적 과정(bottom-up process)으로 정책 및 사업이 실행
 -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기존의 개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공급하는 부처별 단일 사업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다부처 다듬음 계획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중앙-지방-주민 간 실질적 협업 플랫폼을 조성하는 점이 과거 국고 보조금 사업과 차별화된 정책수단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개념 |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최근 지자체들이 시설건립의 부지선정문제, 공공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복합화 선호를 반영하여 복합화 대상 9개 시설을 선정하고 지자체 자체 예산사업과 결합된 공공시설 건립사업과 연계한 사업까지 포함하여 대상의 폭을 확대
 - 현행 생활 SOC 관련 144개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9개의 시설(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

주차장), 타 국비보조사업, 지자체 자체사업을 연계하여 2종 이상의 대상이 입지한 시설물을 대상

- 9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생활SOC사업의 국고보조율의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되, 복합화 대상 9종 시설물 중 2개 이상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비보조율 10%p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적용

| 생활SOC(복합화) 9종 시설과 국고보조율 |

국비보조사업 + α(지자체 자체사업)	부처	시설(사업)명	회계	국고보조율	사업추진 방식
• 생활SOC 복합화 개념 	문체부	공공도서관	균특(자율)	40%	시도 자율
		작은도서관	균특(자율)	70%	시도 자율
		국민체육센터	체육진흥기금	30억 원	공모 선정
		생활문화센터	균특(자율)	40%	시도 자율
		어린이집(국공립)	일반회계	50%	공모 선정
• 생활SOC 복합화 정의 • 복합화 대상 9종 중 2개 이상 포함 + (타 국비보조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가능) 국비보조율 10%p 인상(9종 시설 중 2개 이상 포함시)	복지부	주민건강센터	농특회계	66.7%	공모 선정
			건강기금	66.7%	공모 선정
		다함께돌봄센터	일반회계	50%	공모 선정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양평기금	50%(운영비)	공모 선정
	국토부	주거지주차장	균특(자율)	50%	시도 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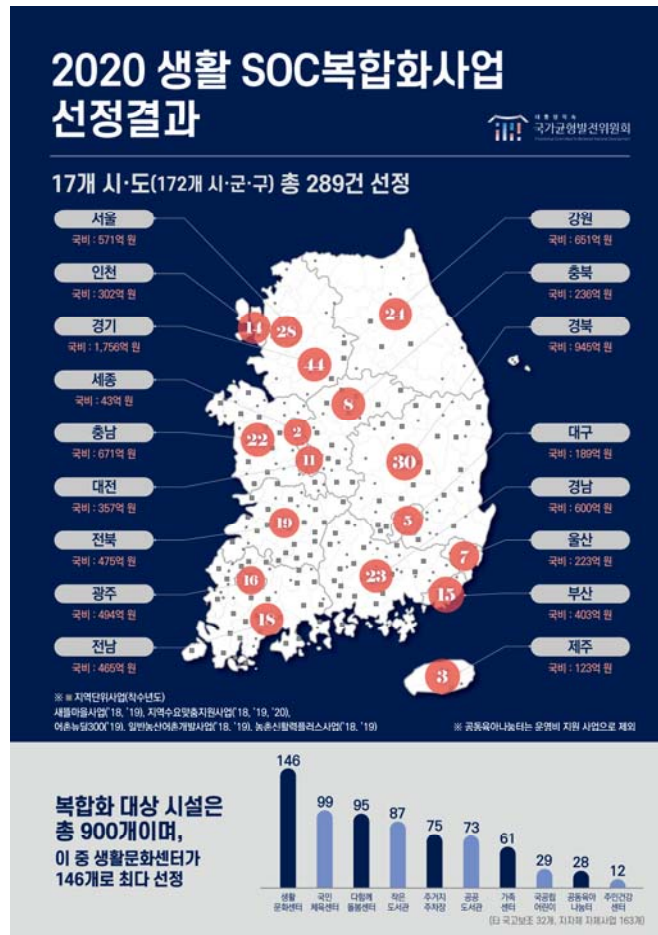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2020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

- '20년도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지역신청에 따라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균형위 위원, 지역별 전문가, 부처 담당자 등으로 컨설팅단 구성)을 실시하여 사업 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7.22부터 8.2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
 -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

- 전문기관TF를 통해 1) 부지선정의 적정성(유사시설 중복여부, 주민 의견수렴도 등)과 2) 사업집행의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등을 중점검토 사항¹⁾으로 평가
-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

| 2020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결과 |



출처 : 국가기원발전위원회 보도자료('19.10.4일자)

1)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7가지의 검토지표를 수립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2) 지역 내 유사중복 여부 및 입지선정의 적절성, 시설 및 서비스 활용의 적절성, 4) 주민수요 및 의견 수렴의 적정성, 5) 시설 및 투자 규모의 적정성, 6) 운영 프로그램 방안의 적절성, 7) 성과창출 가능성을 중점을 평가하였음



-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이 가운데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으며,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 상황이 반영

|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시설별) |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146개(16.2%)	99개(11.0%)	95개(10.6%)	87개(9.7%)	75개(8.3%)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주민건강센터
73개(8.0%)	61개(6.8%)	29개(3.2%)	28개(3.1%)	12개(1.3%)

- 사업들에 대해서는 '20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 원('20년 약 3,417억 원)이 지원되며,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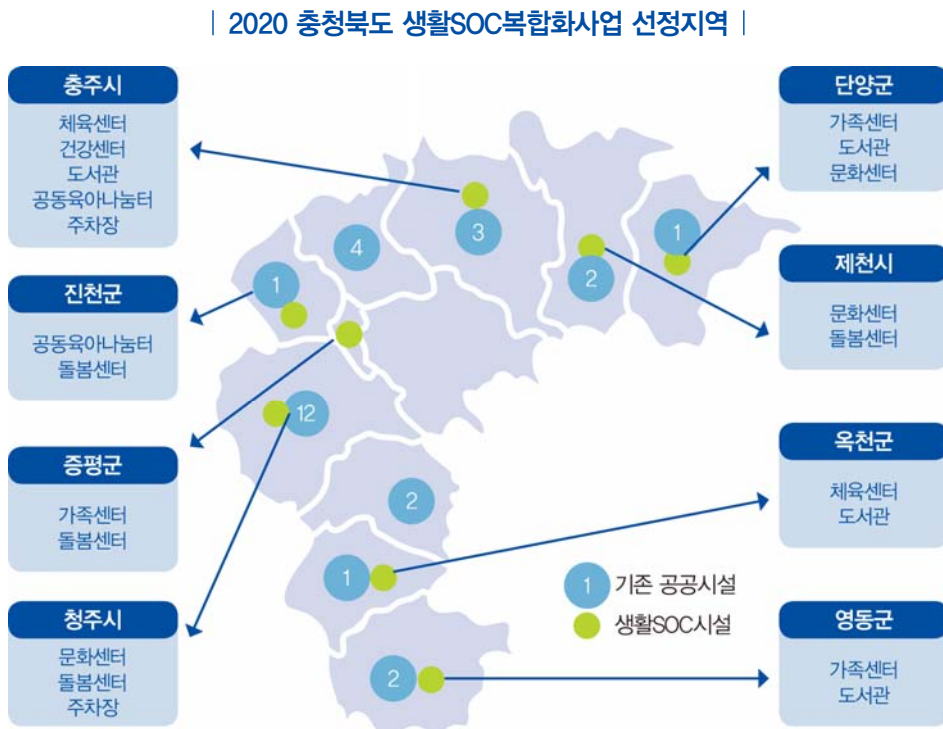
|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국비지원 규모) |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2,670억 원	2,031억 원	1,359억 원	1,150억 원	894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37억 원	122억 원	94억 원	47억 원	- (운영비)

IV 충청북도 생활SOC복합화사업 현황

8개 지자체에 2020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

- 충청북도는 2020생활SOC복합화사업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등 8개 지자체의 생활SOC복합화사업이 선정됨
 - 11개 시·군에서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을 제외한 8개 지자체가 선정
 - 충청북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괴산군은 관련 공공시설이 없음
 - '17년 기준 28개의 공공시설이 충청북도 11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음





- 충청북도는 2020생활SOC복합화사업에 230억 원의 국비 보조를 지원받음
 - 8개 지자체는 신청내역을 보면, 3개 지자체가 가족센터 건립, 2개 지자체가 복합 문화센터, 2개 지자체가 복합체육센터를 신청하였음
 - 기존 28개의 공공시설물의 유형을 보면 15개가 체육시설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속하고, 도서관 및 문화시설이 8개, 사회복지시설이 2개 등이 있음

| 2020 충청북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내역 |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 원)
단양군	울누림 행복가족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7,400
영동군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옥천군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1,312
제천시	일상이 문화가 되는 시민문화센터 '산책' 조성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50
증평군	증평군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92
청주시	영운동 복합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3,200
충주시	충주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주민건강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7,545

순번	자치 단체	시설 유형	시설명	순번	자치 단체	시설 유형	시설명
1	본청	기타시설	충북미래관	15	충주시	체육시설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2		문화시설	청주상당도서관	16	제천시	문화시설	한방생명과학관
3		문화시설	청주시립도서관	17		체육시설	어울림체육센터
4		문화시설	청주고인쇄박물관	18	보은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5	청주시	문화시설	청주예술의전당	19		체육시설	보은공설운동장
6		체육시설	용정축구공원	20	옥천군	체육시설	옥천체육센터
7		체육시설	흥덕축구공원	21	영동군	체육시설	영동체육관
8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22		기타시설	영동국악체험촌

순번	자치 단체	시설 유형	시설명	순번	자치 단체	시설 유형	시설명
9		체육시설	장애인스포츠클럽센터 및 근대5중훈련장	23	진천군	문화시설	진천군립도서관
10	청주시	체육시설	충북스포츠클럽센터	24		문화시설	음성문화예술회관
11		복지시설	목령종합사회복지관	25	음성군	체육시설	감곡생활체육공원
12		복지시설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6		체육시설	금왕생활체육공원
13	충주시	문화시설	충주세계무술박물관	27		체육시설	대소생활체육공원
14		체육시설	충주종합운동장	28	단양군	기타시설	다누리센터

출처 : 통계청: 공공시설운영현황(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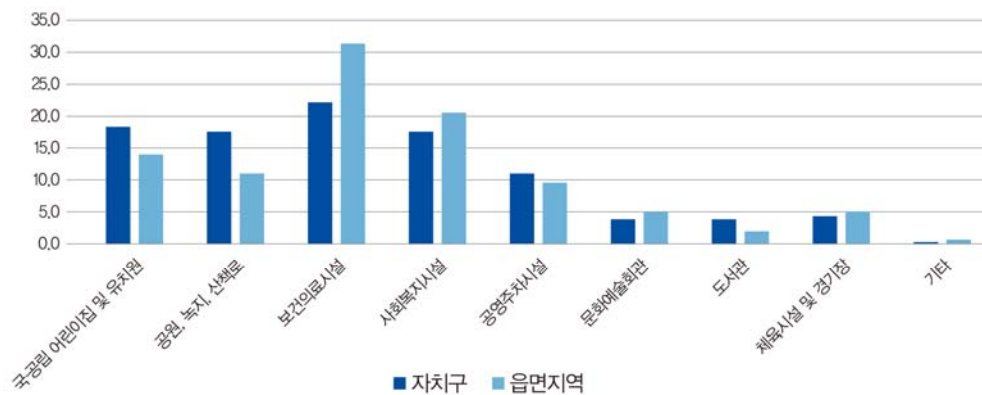
V

공공시설 및 생활SOC 이용현황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응답자 중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응답
 - 읍면동지역은 보건의료시설(31.3%), 사회복지시설(20.4%), 국·공립 어린이집(13.9%) 등의 공공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광역시·도의 자치구 지역 역시, 보건의료시설(22.5%), 국·공립 어린이집(18.2%), 사회복지시설(17.9%)의 순으로 공공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유형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2017)

공공시설 운영수익 실태

- 2017년도 전국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 737개의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 수익시설은 전체의 84개로 전체시설의 11%에 해당
 - 광주광역시의 경우 수익시설은 전체 84%로 최고수준인 반면, 비수도권은 5% 수준

| '17년도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현황 |

광역구분	공공시설개수	수익시설개수	수익기관비율(%)
강원	50	3	0.06
경기	167	17	0.10
경남	64	4	0.06
경북	68	3	0.04
광주	12	10	0.83
대구	26	4	0.15
대전	14	5	0.36
부산	32	5	0.16
서울	78	22	0.28
세종	3	0	0.00
울산	22	0	0.00
인천	27	1	0.04
전남	51	5	0.10
전북	34	2	0.06
제주	11	0	0.00
충남	50	2	0.04
충북	28	1	0.04
총합계	737	84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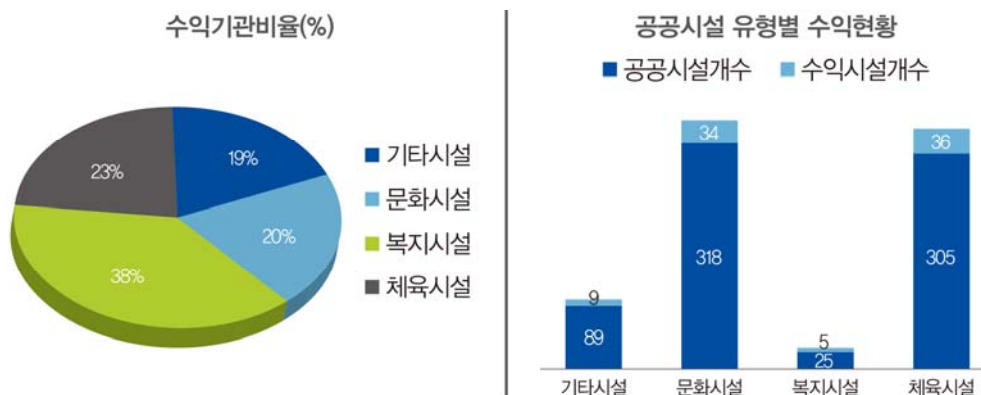
- 공공시설 유형별로 볼 때, 복지시설이 전체 20%로 가장 높고, 체육시설, 복지시설 순으로 수익유형이 나타남
 -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수익시설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 '17년도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유형별 수익현황 |

시설유형	공공시설개수	수익시설개수	수익기관비율(%)
기타시설	89	9	0.10
문화시설	318	34	0.11
복지시설	25	5	0.20
체육시설	305	36	0.12
총합계	737	84	0.11

| 2020 충청북도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지역 |



- 운영방식별로 볼 때, 위탁운영방식은 전체의 19%가 운영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직영운영의 경우에는 전체 3% 채 되지 않음

| 광역지자체별 공공시설 운영방식별 수익현황('17년도) |

광역 구분	운영 방식	공공시설 개수	수익시설 개수	수익기관 비율(%)	광역 구분	운영 방식	공공시설 개수	수익시설 개수	수익기관 비율(%)
강원	위탁	21	2	0.10	세종	위탁	1	0	0.00
	직영	29	1	0.03		직영	2	0	0.00
강원 요약		50	3	0.06	세종 요약		3	0	0.00
경기	위탁	117	17	0.15	울산	BTL	1	0	0.00
	직영	50	0	0.00		위탁	15	0	0.00
경기 요약		167	17	0.10		직영	6	0	0.00
경남	BTL	1	0	0.00	울산 요약		22	0	0.00
	위탁	38	2	0.05	인천	위탁	23	1	0.04
	직영	25	2	0.08		직영	4	0	0.00
경남 요약		64	4	0.06	인천 요약		27	1	0.04
경북	BTL	3	0	0.00	전남	BTL	1	0	0.00
	위탁	13	1	0.08		위탁	6	3	0.50
	직영	52	2	0.04		직영	44	2	0.05
경북 요약		68	3	0.04	전남 요약		51	5	0.10
광주	위탁	11	10	0.91	전북	BTL	2	0	0.00
	직영	1	0	0.00		위탁	6	2	0.33
광주 요약		12	10	0.83		직영	26	0	0.00
대구	위탁	17	4	0.24	전북 요약		34	2	0.06
	직영	9	0	0.00	제주	위탁	1	0	0.00
대구 요약		26	4	0.15		직영	10	0	0.00
대전	위탁	11	5	0.45	제주 요약		11	0	0.00
	직영	3	0	0.00	충남	BTL	7	0	0.00
대전 요약		14	5	0.36		위탁	11	2	0.18
부산	위탁	14	2	0.14		직영	32	0	0.00
	직영	18	3	0.17	충남 요약		50	2	0.04
부산 요약		32	5	0.16	충북	BTL	1	0	0.00
서울	BTO	1	1	1.00		위탁	8	1	0.13
	위탁	64	20	0.31		직영	19	0	0.00
	직영	13	1	0.08	충북 요약		28	1	0.04
서울 요약		78	22	0.28	총합계		737	84	0.11



| '17년도 공공시설 운영방식별 수익현황 |

구분	운영방식	공공시설개수	수익시설개수	수익기관비율(%)
광역분청	BTL	1	0	0
	BTO	1	1	100
	위탁	61	20	33
	직영	32	3	9
구	위탁	91	23	25
	직영	24	1	4
시	BTL	14	0	0
	위탁	186	26	14
	직영	164	4	2
군	BTL	1	0	0
	위탁	37	3	8
	직영	111	3	3
세종분청	위탁	1	0	0
	직영	2	0	0
제주분청	위탁	1	0	0
	직영	10	0	0

공공시설 주민만족도 실태

-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공공시설 주민만족도를 7점 척도로 기준으로 할 때, 대도시, 호남권, 울산광역시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주민만족도의 변화를 볼 때, 충청북도는 '16년보다 '18년도에는 .56p가 증가하여, 공공시설 주민만족도가 가장 높게 증가한 광역도로 나타났음

| 공공시설 주민만족도 실태(2016년도와 2018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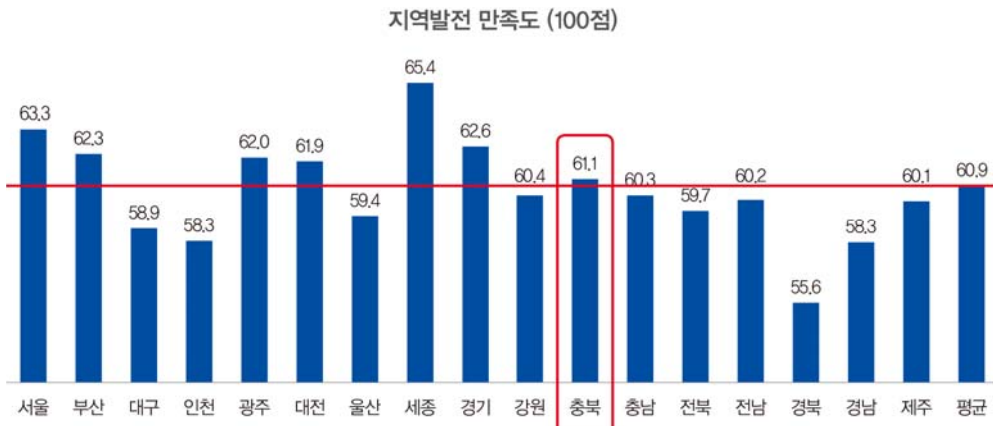
구분	유형	2016	2018	증감율
지역규모	대도시	5.34	5.12	-0.22
	중소도시	5.15	4.96	-0.19
	읍면지역	5.06	5.09	0.03
권역	수도권	5.33	5	-0.33
	강원/제주권	4.45	4.55	0.1
	충청/세종권	4.95	4.97	0.02
	호남권	5.37	5.29	-0.08
	대경권	4.99	5.28	0.29
	동남권	5.23	5.19	-0.04
17개 시도	서울	5.46	5.04	-0.42
	부산	5.13	5.22	0.09
	대구	4.94	5.3	0.36
	인천	5.37	4.98	-0.39
	광주	5.11	5.27	0.16
	대전	4.94	5.12	0.18
	울산	5.44	5.71	0.27
	세종	5.02	5.15	0.13
	경기	5.22	4.98	-0.24
	강원	4.41	4.47	0.06
	충북	4.63	5.19	0.56
	충남	5.21	4.67	-0.54
	전북	5.53	5.33	-0.2
	전남	5.4	5.28	-0.12
	경북	5.02	5.26	0.24
	경남	5.23	4.98	-0.25
	제주	4.57	4.8	0.23

충북도민의 지역발전 인식조사

- '18년 1월에 수행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한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충북도민은 지역발전의 만족도가 61.1점(100점 만점)으로 전국평균(60.9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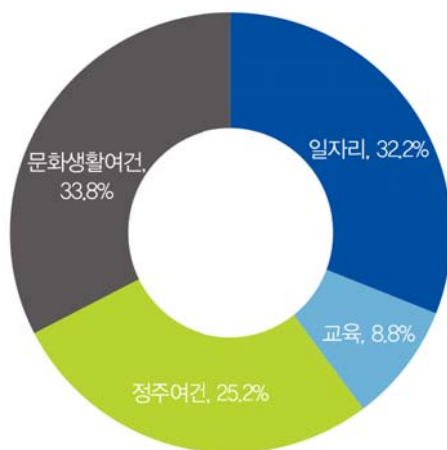
| 충청북도 도민의 지역발전 만족도 |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대국민인식조사

- 충북도민들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분야로 문화생활여건, 일자리 확보, 정주여건, 교육 순으로 응답함
 - 충북지역의 문화생활여건 및 정부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충북도민이 응답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선순위 |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대국민인식조사

VI 생활SOC운영방안 해외사례

토치기현 오타하라시(栃木県大田原市) 생활SOC복합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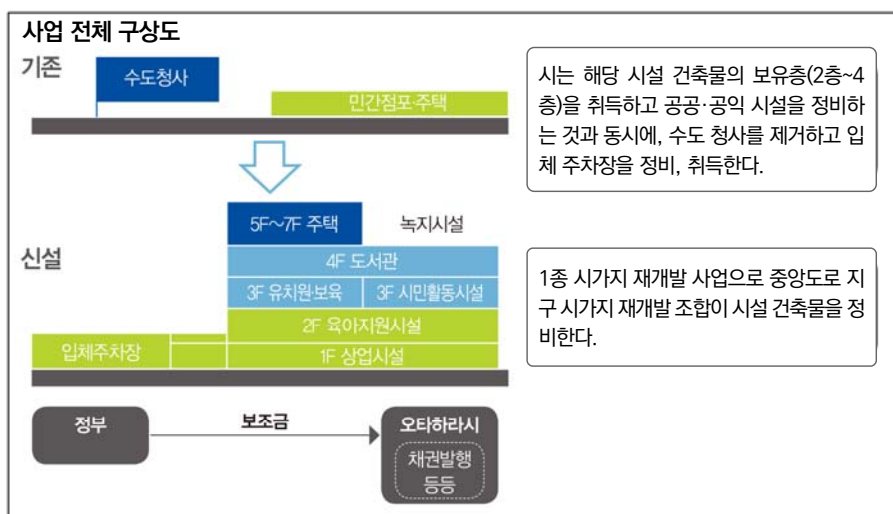
-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에 따라 2008년 중심시가지 재생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오타하라시는 토치기현의 행정·상업의 중심도시로, 2008년 당시 젊은층을 중심으로 교외로의 유출이 진행되어 1989년에 비해 30% 감소의 인구 감소 진행
 - 정주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에 따른 상업 시설의 쇠퇴·감소, 대형점의 교외 입지 및 공공 공익 시설의 분산이 가속화되고, 시가지의 공동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쇠퇴지역
 - 생활SOC복합화사업을 통한 시민 활동·시민 교류·생활 지원 서비스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시민 교류 시설·주차장·녹화 시설을 정비하고 거주 구역에 활기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 구역을 설정
 - 오타하라시 중앙에 위치한 90ha 지역에 총사업비 3,872백만 엔의 사업 수행

| 오타하라시 생활SOC 사업부지 |



- 오타하라시 주관으로 육아지원시설, 시민활동시설, 도서관, 상업시설, 주택 등의 7층의 생활SOC복합화 건물 개발
 - 기존의 오타하라시의 수도청사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고, 기존의 민간점포 및 주택건물 내 시청사 소유보유층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시설을 7층으로 확대
 - 기존의 주택은 최고층으로 배치하되, 중간층은 시소유의 육아지원시설, 시민활동시설, 도서관으로 배치하고, 1층은 상업시설을 운영하되 마을기업이 운영주체가 됨

| 오타하라시 생활SOC 사업 구상도 |



- 오타하라시 생활SOC사업은 국비보조 약 40%의 지원을 통해서 사업수행
 - 오타하라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3,872백만 엔 중에 생활SOC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비용의 약 35%에 해당되는 1,363백만 엔
 - 생활SOC건물에 소요되는 비용의 40%에 해당되는 544백만 엔은 국비보조
 - 오타하라시는 생활SOC건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 오타하라시 생활SOC사업비용 |

단위 : 천 엔

보조금 활용 항목	비용항	보조금 대상금	국비
	조사 설계 계획 비용	6,720	2,688
	토지 정비비	15,000	6,000
도시기능 마을만들기 입지 지원	마을만들기 입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정비비	342,723	137,089
	활기 교류 시설 정비비	378,800	151,520
	시설 구입비	607,750	243,100
	소계	1,350,993	540,397
관련공간 정비	녹화 시설 등의 정비비	12,000	4,000
	소계	12,000	4,000
계획 코드 지원	코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36,000	12,000
	소계	36,000	12,000
	합계	1,398,993	556,397

- 오타하라시 생활SOC사업운영의 주체는 오타하라시 직영과 (주) 오타와마을 만들기 컴퍼니로 오타하라시, 주민, 지역사회법인 등의 제3섹터에서 분리
 - 도서관, 시민활동시설 및 육아지원시설, 주차장관리는 오타하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되, 도서관은 제3자에게 지정관리 형태로 운영함
 - 1층의 상업시설은 (주)오타와마을 만들기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형태임



[㈜오타와마을 만들기 컴퍼니]

- 2006년 11월에 설립된 제3섹터 법인으로 자본금 1억 엔으로 시작
- (목적) 내각부 해세이 '20년 11월 인증 “오타하라시 중심 시가지 활성화 기본 계획”에 따라 마을 만들기 추진과 중심 시가지 활성화협의회, 오타하라시 상공 회의소와 함께 시가지 재개발에 관한 구상, 기획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
- (수익사업) 1) 시가지 재개발 빌딩 1층 상업 시설의 취득에 의한 임대 업무, 2) 재개발 빌딩 전체 및 주차 관리 업무 기타 재개발 관련 사업 운영, 3) 오타하라시 소유 빈점포, 빈집의 임대 업무, 4) (다목적 기능) 대여 회의실의 운영 및 유지보수, 5) 마을 만들기 기획 조정 업무 등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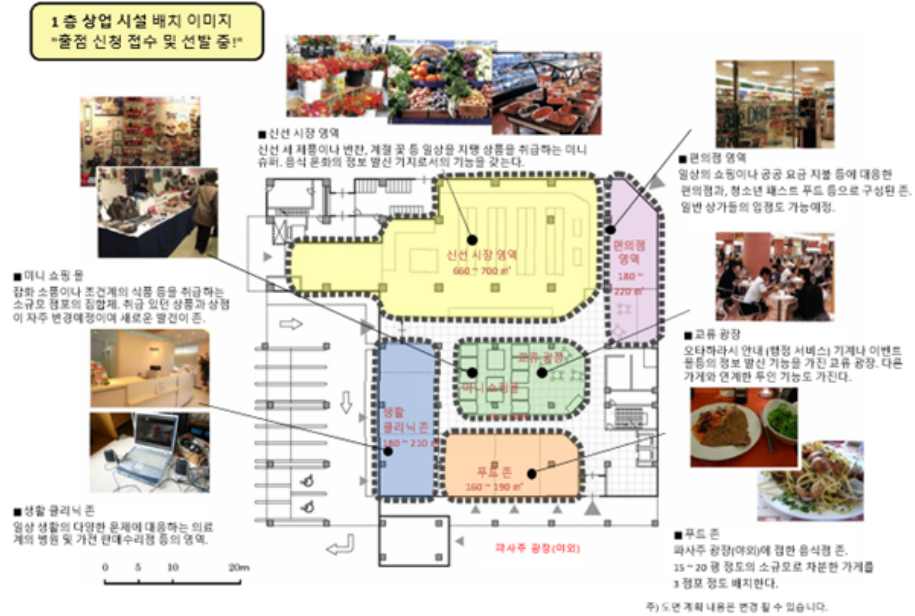
| 오타하라시 생활SOC운영주체 |



가칭	소유자	연면적(㎡)	관리운영 주체	관리운영 형태	토지소유자	추후 권리권자
공공 공익 시설 (도서관)	오타하라시	1,830.21	오타하라시	지정관리	• 종전: 개인 16명, 주식회사 1사, 오타하라시	
공공 공익 시설 (시민활동시설)	오타하라시	1,018.63	오타하라시	직영	• 종후: 권리자(개인 5명, 오타하라시)	소유권 (구분 소유)
공공 공익 시설 (육아지원시설)	오타하라시	2,108.02	오타하라시	직영	• 주택구분 소유자: (주)오타와마을 만들기 컴퍼니	
상업시설	(주)오타와마을 만들기 컴퍼니	1,722.14	재개발빌딩 관리조합	지정관리		
주택시설	권리자 5명, 개인 5명	885.08	재개발빌딩 관리조합	지정관리		

- 오타하라시 생활SOC건물 1층 상가수익사업은 상가를 운영하여 수입을 창출하는데 1) 미니쇼핑몰, 2) 신선시장운영, 3) 편의점, 4) 생활클리닉존(병원 등), 5) 푸드존, 6) 교류 광장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오타하라시 생활SOC빌딩 상가 운영 |



- 오타하라시 생활SOC사업의 효과는 생활SOC를 중심으로 생활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임
 - 생활SOC건물 준공 후 현대식 건축물과 주변의 클래식 역사적 건조물의 대비로 중심 시가지 활성화의 랜드마크형태로 탄생
 - 생활SOC건물 2~4층에는 주민생활에 밀착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1층 상가시설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들이 입주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 상업시설에는 소비뿐만 아니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오타하라시의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는 생활 교류 시설로 확대됨

치바현 우라야스시(千葉県浦安市)의 생활SOC복합화 사업

- 치바현 우라야스시는 신도시로 생활SOC복합화시설에 생활SOC대상시설(육아보육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청년창업소 등)과 우라야스시 행정서비스 센터 및 파출소 등의 행정과 주민밀착형생활SOC의 복합화 사업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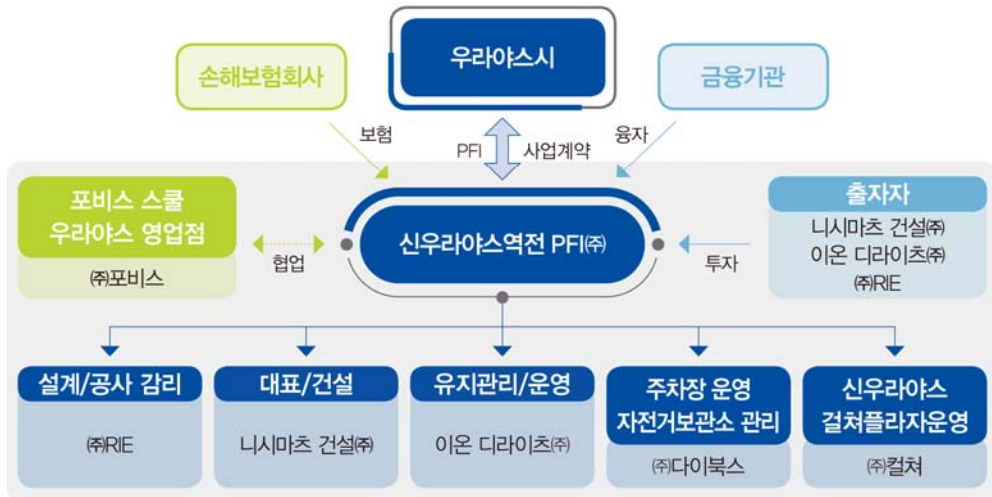
- “시민서비스센터용지”로 확보한 사업 용지에서 시민 서비스 기능의 충실, 지역의 생활 문화의 향상,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형성을 도모
- 이와 같은 시민서비스센터를 설립한 목적에는 우라야스시가 전국 제일의 도시 리조트(디즈니랜드) 운영, 테마파크, 상업 시설, 호텔 등 관광도시의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

| 우라야스시의 시민서비스센터 |



- 치바현 우라야스시의 시민서비스센터는 우라야스시가 민간특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ion)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
 - 총사업비 6,500만 엔을 민자 BTO방식으로 추진하여 PFI방식 제안에 따라 8개사가 입찰하여 (주)신우라야스 역전PFI를 선정, 우라야스시 예상 재정 지출기준 대비 약 5.2억 엔(10.3%)의 VFM(비용 절감)을 달성
 - 민간사업자는 건설, 유지, 운영을 우라야스시는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지대 포함 대가를 20년간 지불 계약

| 우라야스시의 BTO 민자방식 |



- 치바현 우라야스시의 시민서비스센터는 6층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월간 주민이벤트 및 주민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지원기능을 수행함
 - 1) 5, 6층 : 포빈스 스쿨-영어부 / 유치부(풀장,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룸, 0~5세보육실),
 - 2) 4층 : 육아 지원센터, 3) 3층 : 문화 플라자(컬처센터), 4) 2층 : 종합 안내소, 국제센터, 행정 서비스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어린이미술관, 5) 1층 : 관리사무실, 도서실, 파출소, 관광정보실, 청년창업샵, 버스 안내소, 자전거관리실, 6) 지하1층 : 자전거 주차장으로 구성
 - 다문화 공생 페어, 문화 플라자, 인형극, 청소년 토크쇼, 미니전시회 등 다양한 주민이벤트 수행
 -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 컴퓨터 이용, 자전거 공기주입, 무선 인터넷 등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 우라야스시의 시민서비스센터 구성 |





지속가능한 생활SOC의 운영방안

1.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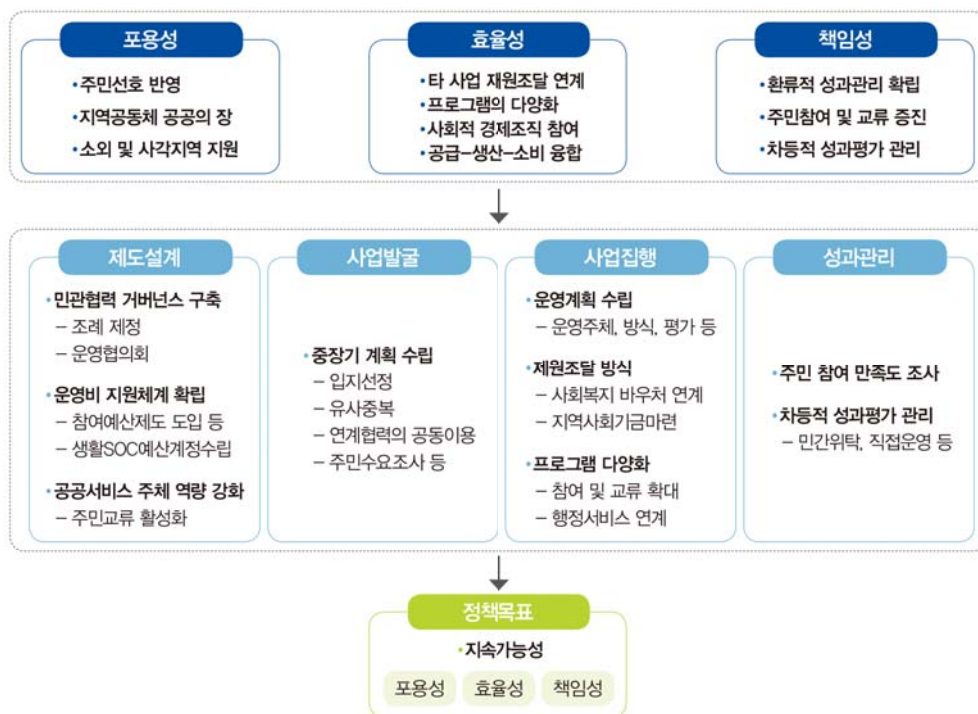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생활SOC사업운용을 위한 정책방향 확립

- 지속가능한 생활SOC사업운용을 위한 제도적 설계 도입
 - 지자체 공급중심의 공공시설서비스 방식을 벗어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 1)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 및 운영협의회 구성, 2) 운영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참여예산제도 및 생활SOC 특별회계 수립, 3) 생활SOC시설에서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도 도입 고려
- 사업발굴단계에서 환류적 성과관리단계까지 **포용적** 사업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
 - 사업발굴단계의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요조사와 참여를 토대로 한 지역주민 주도적 참여 확보
 - 기존의 공공시설 서비스시설과 달리, 생활SOC사업은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한 공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주민-제3기관(민간, 공공기관 등)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효율적** 생활SOC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방안 모색
 -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는 생활SOC운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은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 도차원의 재원조달을 위한 타 사업의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주민참여형 수익사업 마련



- 환류적 성과관리를 통한 생활SOC사업의 **책임성** 고양 방안 모색
 - 주민행정서비스와 연계하여 생활행정서비스 일원화 방안 모색
 - 주민참여 및 교류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교류의 활성화
 - 주민만족도 조사를 반영한 서비스 운영방식에 따른 차등적 성과관리 제도 모색

|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방안 방향 |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80호(2019.12)

2. 생활 SOC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지속가능한 생활SOC사업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

- 생활SOC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역주도의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발굴단계에서 환류적 성과관리까지의 체계화된 지침 마련 필요
 - 생활SOC는 기존의 운영되는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입지발굴과 연계협력 하는 운영 및 성과관리의 운용지침을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 또한 기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추가되어 건설되는 생활SOC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추가적인 재원에 따른 운영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생활SOC 운용지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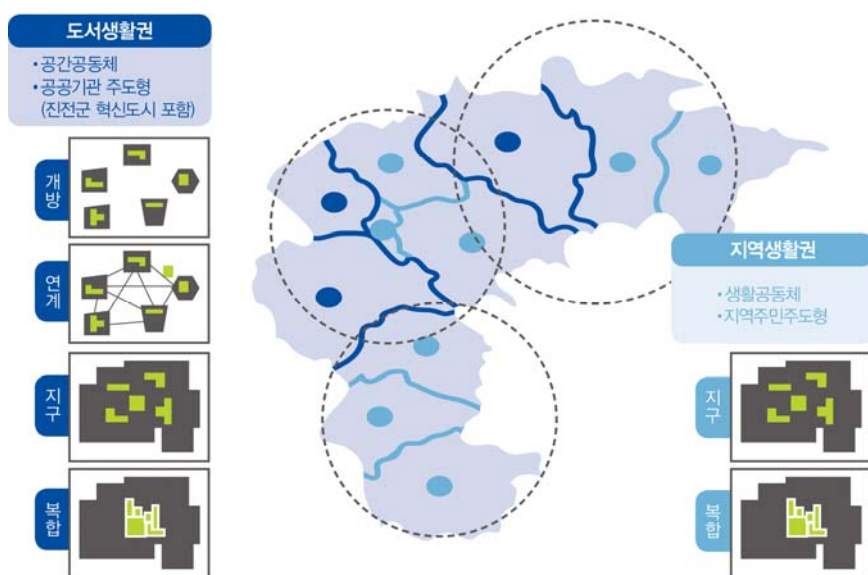
계획항목	계획내용
① 생활SOC 사업발굴	
입지적 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 검토지역 사업 입지가 소외지역(사각지역, 부족지역)이면서, 서비스 소외인구 밀집지역에 해당하는지 • 지자체 별도기준에 의한 적정 입지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특별지역, 성장촉진지역 등 지방재정이 열악하나 마중물 역할이 긴요한 지역 등
필수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확보 공유지, 유휴토지, 기존 시설부지 등 적절하게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 • 유사시설 非중복 인근에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기존 시설 또는 추진 중인 생활SOC 관련 사업이 없는지 검토
가점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 가능성 (협약체결 등)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인접한 he지자체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② 사업 집행 및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지원제외 사업 여부 • 지방비 등 재원조달 가능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 여부 • 시설유지·운영의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비보조 지원제외 및 중복신청 금지 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건립 후 운영주체, 운영방식, 운영평가 등 운영계획이 타당한지 운영·유지비용 예측 및 비용 해소방안이 있는지 (녹색건축물 도입, 사회적 기업 참여 등)
③ 환류적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선정시 수요 반영 • 주민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인지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재구성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사업과 연계한 종합생활권 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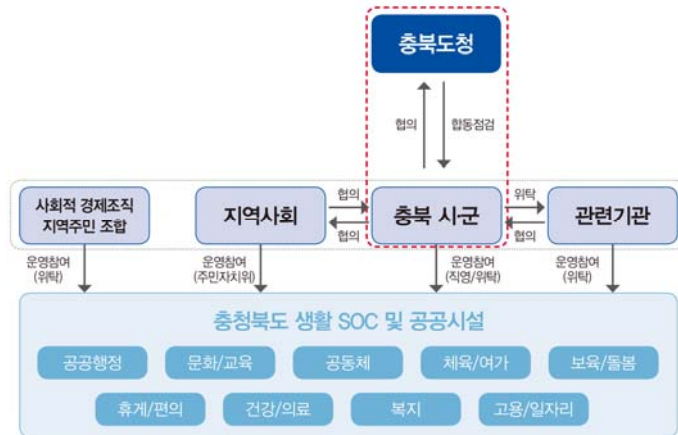
-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사업 등의 사업연계를 통한 공공시설과 생활SOC시설 관련 종합생활권 계획 수립 검토
 - 충청북도 내 11개 기초지자체의 기존 공공시설과 '20년 생활SOC시설을 생활권 유형에 따른 시설입지와 설계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기존 시설의 공간입지와 연계하되, 생활권 유형(도시생활권과 지역생활권)의 유형에 따른 시설공간의 설계 재검토
 - 사회·경제적 변화(예, 인구감소 노령화 등) 1) 광역차원에서는 정주자립권 모형에 따른 중추도시와 주변 시·군과의 연계협력 계획을 수립, 2) 기초지자체 내에서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존 공공시설을 포함한 생활SOC시설의 설계 및 연계방안을 모색 하되, 도시생활권과 지역생활권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정책 마련
 - '20년 생활SOC시설은 8개 시·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21년에는 음성, 괴산, 보은 등의 지역의 생활SOC사업을 추진과 함께 서비스 사각지역을 배려한 소형생활SOC 발굴 필요

| 충청북도 생활권 별 기존 공공시설과 생활 SOC 연계방안 안 |



- 생활SOC 중심의 생활권 프로그램 전달체계 플랫폼 구축
 - 충청북도 내 2020년에 조성되는 8개의 생활SOC가 도시생활권,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거점이 되는 프로그램 전달체계 플랫폼 구축 필요
 - 기존의 28개의 공공시설과 연계운영 및 프로그램 중복을 미연에 프로그램 운영체계 마련, 시설 및 프로그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주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및 전달체계 마련
 - 서울시는 공동체 주택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도입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내 프로그램의 활성화(카페, 연극공연 등 프로그램 발굴, 공동체 규약 정상, 주민 교육 등)가 기여하고 있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6)
 - 충청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능기부,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조직 및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한 방안 검토

| 충청도 생활 SOC 프로그램 전달체계 플랫폼 안 |



지속가능한 생활SOC사업운용을 위한 법·제도 설계

- ‘공유자산 및 생활SOC 관리에 관한 조례(가칭)’를 통한 근거 규정 마련
 - 인구감소·고령화시대에 기초시·군 행정구역에서는 기존 유휴 공공시설 및 미활용 국공유지의 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필요



- 특히, 새롭게 신축되는 생활SOC시설은 기존의 유휴 공공시설 및 미활용된 국공유지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생활SOC시설을 포함한 충청북도 내의 공유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활SOC사업관리를 검토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계한 생활SOC예산 특별회계 수립
 - 생활SOC시설 운영·관리의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을 위한 근거 제도 마련을 통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기초 시·군의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계적인 제도 검토
 - 세종특별자치시는 '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의 특별회계 대상 사업에 대해 157억 원의 재원규모를 확보하여 향후 5년간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

효율적 생활SOC시설 운영을 위한 투자확대 방안 모색

-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활SOC시설 운영 및 관리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문재인 정부는 '18년도 2월 사회적 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가치기금(가칭)을 설립 지원하는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전용펀드 조성 및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생활SOC3개년 계획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운영재원조달 방안으로 지역금융기관이 주민의 기부금을 적립하는 “공익신탁제도” 및 지자체의 출연을 통한 자립적 운영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
- 중앙주도의 생활SOC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 내에서 지역 선순환 생활SOC 운영 생태계 조성
 - 현행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기초할 때, 지자체가 생활SOC 운영·관리비를 부담할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비용에 더하여 추가적 재정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지자체의 재정 우선순위 사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지자체가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산관리 및 운영·관리제도가 정착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중앙주도의 생활SOC 운영·관리 지원 내에서 생활SOC 운영 생태계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생활SOC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을 고려할 때, 노령층, 학부모, 육아부모 등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의 일정부분을 생활SOC 바우처로 전환하여,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영·관리방안 모색 검토
- 더불어, 일본의 사례에서 생활SOC시설 설립의 BTO방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SOC 운영의 재원 마련

환류적 성과관리를 통한 생활SOC사업의 책임성 고양 방안

-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형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특화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생활밀착형 생활SOC시설 운영 마련
 - 생활SOC시설의 여건에 따라 주민들의 최소한의 복지에 필요한 공통적용의 기본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되, 선택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특화형 프로그램을 토대로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매년 주민들의 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토대로 운영방안 개선 검토
 - 일본의 다케오시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관과 다케오시와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용실태 및 프로그램에 관한 소통을 강화하고,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운영방안의 제도 개선 향상을 꾀함
- 공공시설들의 운영·관리에 관한 차등적 성과평가 관리체계 도입 필요
 - 인구감소 및 노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기존의 공공시설과 추가되는 생활SOC시설에 관한 운영·관리의 성과평가 관리제도를 마련할 필요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유휴시설의 증가에 따른 시설의 통·폐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관한 성과평가 관리체계 도입 필요



|| 참고문헌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 대국민인식조사 결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19.10.4일자)
- 국무조정실 생활 SOC 추진단. 2019. 생활 SOC 3개년 계획(안)(2020~2022).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2018.12.31).
- 통계청. 공공시설운영현황(2017).
- 통계청. 사회조사(201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슈와 포럼. '19년 4월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80호(2019.1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16).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 OECD 경제보고서(2018). <http://www.oecd.org/economy/korea-economic-snapshot/>.